

‘인사청탁·수사무마’ 검·경 치부 드러낸 브로커 수사 일단락

18명 기소에 10명 구속...광주지검 “브로커 관련 의혹 철저 수사” 관공공사 수주 비리 수사 주목

광주·전남 경찰의 치부를 드러낸 검찰의 사건 브로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전 전남경찰청장이 극단 선택을 했고 전 광주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13명이 사건브로커와 연관돼 재판을 받게됐다. 소문으로 떠돌던 청탁 승진이 적발됐고 검·경의 수사기밀도 인맥과 금품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는 설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코인 사기 용의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첩보를 입수하면서 성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씨와 공범은 검·경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통한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자산사기범 B(45·별도 구속기소)씨로부터 1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는 평소 수십 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골

프 접대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진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총경들이나 치안감조사 성씨를 ‘형님’으로 부르며 광주·전남지역 수사·인사 청탁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검찰은 코인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검·경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광주·전남 경찰인사 청탁 비위를 수사해 왔다. 수사무마를 위해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과 현직 검찰 수사관 등 2명이 구속기소 됐고, 수사 기밀 등을 유출한 현직 검경 수사관 3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성씨는 코인사기범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경찰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무관(60·구속기소)에게 4000만원을 주고 사건담당 경찰관(불구속기소)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

또 광주지역에서 진행된 수사에도 관여했다. 광주광안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당시 담당 수사과장(불구속기소)에게 640만원을 주고 수사 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구속기소)이 광주지검 검찰수사관(불구속기소)을 통해 압수수색 정보와 사건 내용 등을 빼낸 것도 확인됐다. 성씨가 관여한 인사청탁과 관련해 현직 경찰 5명 등 총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심사승진의 경우, 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되는 탓에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성씨의 인사청탁은 전남경찰에 집중됐다. 이 탓에 수사 진행 중 전직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감 승진은 1000~2000만원이 전달됐고, 경정 승진 대가로는 3000만원 인박이 오갔다. 전남경찰청 인사 청탁에는 전직 경감 C(66)씨가 또 다른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이 확인됐다. C씨와 성씨를 통해 경감·경정 승진을 청탁한 전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은 6명(3명 구속·3명 불구속)에 달했다. 인사와 수사 무마 비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성씨와 지인이 테크사업 등 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정치계 인사들과 모임이 가졌다는 증언들이 이어짐에 따라 검찰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사건브로커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인사비리와 수사무마 비리도 추가 관련자가 나온다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라운드에서 봄별 낮기온이 최고19도까지 오른 14일 광주시 동구 용산동 용산생활체육공원에서 광주FC U-15팀 선수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경찰청 광역형사체제로 재편... ‘형사기동대’ 신설

78명 규모 강력범죄·마약 수사 등

광주경찰청이 ‘치안 중심 조직 개편’을 위해 형사기동대를 꾸렸다. 다만 형사들이 범죄 예방 활동에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 등 기존 46명 인력에 일선 경찰서 형사 인력 32명을 증원해 총 78명 규모로 형사기동대를 운영한다. 신설 형사기동대는 기동대장(총경) 산하에 형사기동 1팀, 형사기동 2팀, 마약수사계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형사기동대 출범으로 광주지역 형사사건 수사는 범죄예방, 첩보 수집, 인지수사 기능을 강화한 광역형사체제로 재편된다.

형사기동대는 조직폭력 전담반을 구성해 유형업소 밀집 지역, 재건축·재개발지역, 불법도박장 등 조직폭력배를 주 활동 지역에서의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대응한다.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하는 투자리딩 관련 사기, 전세 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전문 수사 부서도 설치한다. 화재 전문수사관, 건축 자격증 소유자, 의료사고 특별재용 경찰, 피싱 범죄 전문수사관 등 전문성을 갖춘 경찰을 형사기동대에 배치해 전문성도 강화했다. 관속기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은 “범죄 취약지나 우범지역 등에 대한 현장 치안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검거가 최선의 예방이라는 신념으로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고법·지법원장 재판 맡는다...장기 미제사건 신속 재판

민사 재판부 3개 신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과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이 올해부터 재판 업무를 맡는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을 맡겨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후속조치다.

14일 광주지법과 고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법원 정기인사 시작일부터 민사 재판부 3개를 신설한다. 광주고법은 민사합의부를 기존 3개에서 민사 4부와 민사 5부를 신설해 5개 재판부를 운영한다. 민사 5부는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항고사건을 처리해 기존 항고 사건을 병행해온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준다. 민사4부는 행정재판을 전담하던 고법 수석판사가 민사 재판을 추가로 맡는다.

광주지법은 박병태 지법원장이 신설되는 민사5부(항소 재판부)를 맡아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미제 사건 등을 일부 재배당해 담당하고, 새로운 민사 재판도 일정 비율 배당받는다. 광주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해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신속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감사원 “도교육청 전광판 설치 위법 없다”

전교조 공익감사 청구 종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의 전광판 설치 특혜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며 종결 처리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교조가 감사를 요청한 도교육청 학교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공사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한 것이 국가계약법상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계약한 점을 고려하면 업체와 유착 관계로 계약이 독점·편중됐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업체와 교육청이 결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보완 자료도 전교조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물품 구입과 관련해선 “연간 계획에 따라 학교별 수요 조사를 하고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구매했고 수의 계약으로 구매한 것을 두고 예산 낭비와 비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종결에 대해 전교조는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에 추가 보완 자료를 보냈다”며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것인데 특혜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